

국 제 법

2022년도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2차시험

응시번호 :

성명 :

제 1 문. A 국은 수십 년 동안 부자(父子)에 걸친 세습통치를 이어오고 있다. A 국의 X 지역에는 A 국의 다른 지역과는 인종과 언어가 다른 소수민족이 주로 거주하는데, 이들은 특히 위 세습통치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. 이러한 이유로 A 국은 이 지역의 소수민족 지도자와 그 추종자들을 극단적으로 억압하고 이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. 2021년 11월 X 지역에서 발생한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세습통치를 반대하는 소수민족 수백 명이 정부군에 의하여 살해되었으며, 수천 명이 체포되었다. (단, A 국은 UN 회원국이 아니다)

(총 40점)

- 1) 위 사안과 관련하여 UN 안전보장이사회가 A 국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는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강제조치 종류를 논하시오. (20점)
- 2) 위 사안과 관련하여 국제형사재판소(ICC)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관할범죄 및 그 요건을 검토하시오. (10점)
- 3) A 국이 로마규정(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) 미가입국이라고 가정할 때, ICC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여부를 논하시오. (10점)

제 2 문. A 국의 외교관 甲은 B 국 정부로부터 아그레망(agrément)을 수여 받고 자국의 국가원수가 발부한 신임장을 소지하고 B 국의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. 甲은 B 국 공항에서 입국 수속 중 출입국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X 공항공사(公社) 소속 직원 乙과 언쟁을 벌이게 되었다. 언쟁이 격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甲은 입국검사 업무를 수행하던 乙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. 그 과정에서 공항 시설물의 일부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. 甲의 폭력 행사를 지켜보던 공사 직원 丙은 乙이 甲에게 폭행당하는 모습에 격분하여 주변에 있던 물건으로 甲을 마구 때려 심하게 다치게 하였다. (단, A 국과 B 국 모두 '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'의 회원국이다)

(총 30점)

- 1) 폭력을 행사한 외교관 甲에 대하여 B 국은 아직 신임장이 국가 원수에게 제정(提呈)되기 이전이므로 직무가 개시되지 않았고, 형사재판관할권의 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폭행죄로 처벌하고자 한다. B 국 주장의 정당성 여부를 검토하시오. (10점)
- 2) A 국은 丙의 폭행으로 인해 자국의 외교관 甲이 신체 여러 곳에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丙의 폭력행사에 대해 B 국에게 국가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. 공사 직원인 丙의 행위가 B 국의 행위로 귀속되는지 여부를 UN 국제법위원회(ILC)의 2001년 '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규정 초안'을 바탕으로 판단하시오. (10점)
- 3) 乙이 소속된 B 국의 X 공항공사는 직원 乙의 신체에 대한 피해 및 공항 시설물 파손에 따른 손해에 대해 외교관 甲의 파견국인 A 국을 상대로 B 국의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. B 국의 법원이 이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하시오. (10점)

제 3 문. A 국과 B 국은 양국 영역 내 대기오염도가 높아지자 양국 간 환경부장관 회의를 통해 대기환경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‘대기환경협약’(이하 ‘협약’)을 체결하기로 하였다. 이 협약문에 따르면, 양국은 국경선 20 km 지역 내 일정 규모의 대기오염시설 건설을 허가할 경우 타 당사국에게 이를 통지하고 허가 조건에 대해 상호 협의해야 한다. 이 협약이 체결될 경우 일반적으로 양국 국민의 재산권에 제한이 가해지며 국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수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. B 국 ‘예산처리재정법’(이하 ‘법률’)에 따르면, 국민의 재산권에 제한을 가하고 국가 재정에 부담을 수반하는 협약 체결 시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. 그러나 B 국 정부는 별도의 비준 동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협약에 서명하였다. A 국은 협약 서명 후 발효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B 국과의 국경선 인근 10 km 지역 내 대형 제철공장을 건설할 것을 허가하였으나, 이 과정에서 B 국과의 협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. (단, A 국과 B 국은 모두 ‘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’의 회원국이다) (총 30점)

- 1) 협약 발효 후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로 취임한 B 국 대통령은 A 국을 상대로, 법률에 규정된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생략한 것은 조약체결권에 관한 국내법 규정의 위반이므로 협약이 무효임을 주장하였다. 이 주장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시오. (10점)
- 2) 이러한 무효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, B 국 대통령은 A 국이 대형 제철공장 건설 허가 시 B 국과 협의하지 않은 것은 협약의 중대한 위반으로서 조약의 종료사유임을 주장하였다. 이 주장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시오. (20점)

인사혁신처 시험출제과장